

# 이스라엘군, 가자지구 하마스 땅굴 바닷물 침수작전 시작

### 지하터널 파괴 하마스·인질 지상으로 끌어올리려는 목적 식수·토양 오염 가능성... 전후에도 인도주의 참사 우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소탕을 위한 가자지구 지상전을 이어가는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지하터널에 바닷물을 채우기 시작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에 대해 브리핑 받은 미국 관리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지하터널을 파괴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지난달부터 바닷물을 이용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바닷물을 끌어오기 위해 지난달 5대의 펌프를 설치한 데 이어 2대의 펌프를 추가했으며, 몇 가지 테스트를 거쳐 터널 침수 작전을 시작했다.

터널을 침수시켜 지하에 있는 하마스 지도부와 대원, 인질이 지상으로 올라오게 하려는 작전이다. 펌프 가동으로 몇 주 안에 터널을 물에 잠기게 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지만, 이 작전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두고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WSJ은 앞서 지난 4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알사티 난민캠프 북쪽으로 4km 가량 떨어진 지점에 펌프를 설치했으며, 펌프 1개는 지중해로부터 시간당 수천리터의 바닷물을 끌어올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총길이 500km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

터널의 파괴는 이스라엘군의 핵심 목표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가자지구 전역에 조성된 땅굴을 통해 무기와 군수물자를 반입해 저장하고, 지도자들은 작전본부로 차려 공격을 지휘한다고 판단한다.

지하터널이 견재하고 궁지에 몰린 하마스가 지하로 숨어들 경우 종전 후에도 장기간 지하에서 저항할 수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 같은 지하 시스템을 파괴하기 위해 공습은 물론이고, 액체 폭발물이나 로켓, 개, 드론 등을 투입했지만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군은 전술적 화력 우위를 발휘할 수 없고 부비트랩 등 함정을 만날 수 있는 지하로 병력을 보내는 것은 꺼려왔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의 지하와 하마스의 마지막 거점 중 하나인 남부 도시 칸 유니스 지하에서 작전을 강화하고 있는데, 하마스의 완전 해체를 위해 바닷물 침수 작전까지 꺼내 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터널의 구조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작전 성공 가능성은 확실하지 않다. 인도주의적 참사를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강하게 제기된다.

WSJ에 따르면 미 정부의 일부 관리들도 터널에

바닷물을 부을 경우 가자지구의 지하수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마스의 지하터널로 물이 얼마나 흘러 들어갈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량의 소금물을 쏟아부을 경우 지하수와 기존의 정수 시설이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이고 토양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전쟁 후에 추가로 인도주의적 참사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 대목이다.

앞서 이집트 정부가 2015년 밀수꾼들이 라파 국경 인근에 설치한 지하 터널을 없애려 해수를 채워 넣자 인근에서 작물을 키우던 농민들이 염분으로 인해 큰 피해를 봤다.

하마스가 여전히 137명의 인질을 억류하고 있는 가운데 인질 가족들은 침수 작전을 반대한다.

가족들은 베나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한 면담에서 터널이 침수되면 인질도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대변인은 하마스 터널 관련 작전은 기밀로 분류돼 있다며 이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앞서 헤르즈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하마스의 땅굴에 바닷물을 들이붓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그는 지난 6일 하마스 땅굴에 바닷물을 붓는 방안에 관한 질문에 "적으로부터 터널이라는 자산을 빼앗는 것은 우리가 검토 중인 것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공격을 피해 집을 떠난 가자지구 여성들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남부 라파의 임시 천막 근처 거리에서 빵을 굽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교전이 두 달 이상 이어지면서 가자지구에서 감염병이 확산하고 있다.

## 美 새 문화전쟁 반유대주의 논란... 대선 이슈로 떠오르나

### 의회 청문회 총장들 발언 여진 공화당, 대학들 '좌편향' 공격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으로 미국에서 반유대주의 문제가 첨예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내년 미 대선에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특히 공화당이 그간 대학 등 교육기관들을 겨냥해 '문화 전쟁'(cultural war)을 벌여온 가운데 미국 명문대 총장들 반유대주의로 몰아붙여 물러나게 하는 '성과'를 겨냥 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 증폭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12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과대(MIT), 펜실베이니아대(유펜) 총장들이 지난 5일 미 하원 반유대주의 관련 청문회에서 한 발언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세 총장은 청문회에서 일부 학생들의 반유대주의 발언이 대학의 윤리 규범 위반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피하고 말을 돌렸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후 이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난 끝에 엘리자베스 매길 유펜 총장이 물러났다.

클로딘 게이 하버드대 총장과 셸리 콘블루스 MIT 총장은 소속 대학 이사회의 지지를 받아 유임이 결정됐지만, 평판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다.

이로써 총장들의 거취 논란은 일단 마무리됐으나, 이번 일로 대학 안팎과 정치권에서 격렬한 반응이 터져 나온 점을 고려하면 파장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버지니아 폭스 하원 교육위원장(공화)은 청문회 이후 총장들의 증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난하고 이들 3개 대학의 반유대주의에 대해 공식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미 교육부도 하버드대와 유펜, 코넬대, 컬럼비아대 등의 유대인과 무슬림을 향한 혐오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공화당이 이번 논란으로 유펜 총장을 낙마시키는 데 성공함에 따라 앞으로 교육 현장의 문화 전쟁에 더욱 열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AP통신은 이들에 대한 비난 여론으로 공화당이 미 명문대의 진보 성향을 겨냥해 벌여온 이념 전쟁이 한층 힘을 받고 있으며, 공화당과 일부 대학 후원자들이 이번 논란을 미국 고등교육을 뜯어고치는 기회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세 총장을 가장 몰아붙인 엘리 스테파니(공화) 의원은 지난 8일 온라인 매체 '뉴욕 선'과 인터뷰에서 "이번 청문회로 지각변동 수준의 여파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는 고등교육의 지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논란으로 공화당이

대학을 공격하면서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기회를 드디어 잡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간 보수파는 미국 대학들을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문화로 인해 좌편향돼 있다고 공격했지만,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에 분위기를 뒤집어 대학과 진보파가 반유대주의 같은 혐오에 빠져 있고 편협하다고 비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민주당 측에서도 세 총장에 대한 비판에 가세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번 논란이 민주당·진보 진영 내 분열을 부추기는 성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의회에서 세 총장에 대한 초당적 비판 여론이 커져 미 의회 의원 70명 이상이 이들의 해임을 요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유펜이 위치한 펜실베이니아주의 조지 사피로(민주) 주지사는 청문회 다음 날 "유대인뿐 아니라 어떤 인종에 대한 학살도 허용해선 안 된다"며 매길 총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유펜 이사회 일원인 사피로 주지사는 매길 총장의 진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이사회 소집 필요성도 거론, 사실상 사퇴 쪽에 힘을 실었다.

유대인인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도 CBS 방송에서 "누군가가 유대인 제노사이드(집단 말살)의 가치를 믿는다고 말하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 "COP28 합의문 새 초안, 화석연료 '퇴출' 빠져

### 10년안에 '전환' 시작 문구 포함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의 새 합의문 초안에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10년 안에 화석연료로부터 '전환'을 시작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로이터, AP통신 등에 따르면 올해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UAE)는 13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 번째 합의문 초안을 작성해 당사국들에 공유했다.

새 합의문 초안은 100개 이상 당사국이 요구한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phase-out)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대신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transitioning away)을 당사국들에 촉구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3배로 늘리고 배출가스 저감이 미비한(unabated) 석탄 화력발전소를 신속히 폐기하고 신규 허가를 제한한다는 내용 등은 유지됐다.

COP28은 화석연료 퇴출을 둘러싸고 산유국·저개발국과 유럽연합(EU)·일부 선진국 사이의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폐막일인 12일까지 최종 합의문을 내지 못했다.

## 일본, 방위비 재원 위해 전자담배 증세 검토

일본 정부와 여당이 방위력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지신문(닛케이)과 산케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당정은 전자담배 세금을 일방적인 연초담배와 동등한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일본에서는 전자담배 세금이 연초담배보다 10~30% 적다.

일본 정부는 전일 여당 세제협의회에서 "전자담배와 연초담배의 세금 부담 차이를 해소해 과세 적

정화에 따른 수입 증대를 방위비 재원에 활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5년간 방위비로 약 43조엔(약 389조원)을 확보하기로 했고, 대폭 늘어날 방위비 일부는 법인세·소득세·담뱃세를 올려 충당하기로 했다.

한편, 일본 당정은 내년 6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감세 혜택이 부유층에는 돌아가지 않도록 연간 수입이 2천만엔(약 1억8천만원)을 넘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

#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